

경제위기 이후 취약계층 여성의 가족·문화, 노동, 복지, 건강과 사회안전망 개선방안

수행과제명 :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변화실태와 사회안전망 평가 및 향후 대책방안:
젠더적 관점의 Human New Deal 정책

과제책임자 : 변화순 선임연구위원 Tel : 02-3156-7140, e-mail : hwasoon@kwdimail.re.kr

요약

경제위기 이후 삶의 질이 열악한 취약계층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분절적이고 수동적이며 사후적인 사회안전망을 추구하기 보다는 이들의 가족문화, 노동, 복지, 건강 등 전체 삶의 영역 모두를 아우르는 다차원적이고 통합적이며 예방적인 방안의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함

1.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

- 경제위기는 어느 계층보다 취약계층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고, 이들의 전반적인 삶은 더욱 악화됨. 특히 여성의 가족·문화, 노동, 복지, 건강 영역은 남성보다 더욱 열악한 위치에 있어 가정 내 빈곤과 갈등 그리고 사회적 차별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. 따라서 개인의 삶의 질을 지원하는 기존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젠더적 관점에서의 평가와 다양한 생활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 개선방안 모색이 매우 중요함.

- 최근 정부의 휴먼뉴딜 정책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인적역량 강화를 중시

하고 있음. 그러나 남성과 여성이 직면한 상이한 생활영역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우선적 인적역량 개발 및 다차원적 방향의 사회안전망 개선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음.

- 취약계층 여성의 가정경제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가정 내외적으로 여성에게 요구되는 다중역할은 부부관계성과 자녀의 자립도를 약화시킴.
- 경제위기는 남성배우자의 실업 혹은 부재로 이어짐. 이에 여성가구주 가구와 여성한부모가구의 증가를 야기하였으나, 경제활동 여성의 대다수는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은 2차 노동시장에 있으므로 인해 취약계층 여성의 빈곤화는 지속되고 있음.

□ 취약계층 여성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이들이 처한 다양한 삶의 영역(가족·문화, 노동, 복지, 건강)에서의 변화실태를 살펴보고, 이를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다차원적이고 통합적인 사회안전망 모색이 필요함.

2. 정책의 추진방향

□ 가족문화관련 사회적 안전망 정책 제언

- 보편적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접근성 확대 필요
 - 이용자 수, 교통, 시설유형 등을 고려한 적정 개소수의 시설 배치가 각 지방자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설계·설치되어야 함.
 - 사회복지관, 건강가정지원센터, 가정폭력상담소 및 지원시설 이외의 민간자원 연계 활성화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공급체계가 필요함.
- 사전적 예방사업과 사후 치료적 차원에서의 부부관계성에 대한 중요성 부여
 - 건강가정지원사업은 가족의 안전성 강화와 가족관계 증진이라는 목표 설정과 더불어 예방적 성격을 가짐. 이에 더하여 사후 치료적 차원의 중

요성을 부각하면서 부부관계성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, 정책의 홍보가 필요함.

- 소관부처 일원화와 관련기관의 연계방안 활성화 필요
 - 가족안전망 정책을 관리·규제하는 부처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로서 규제·지원·감독의 역할이 두 부처로 나뉘어짐. 이에 따라 네트워크의 효과성과 전달체계의 통합성 등에 문제가 있어 소관부처 일원화와 유관기관간의 연계 활성화가 요구됨.

- 빈곤탈피를 위한 취약계층 아동·청소년 지원 사업 서비스대상을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 필요
 -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높지만 사회통념상 빈곤한 계층과 차상위 계층의 아동·청소년을 모두 포함시켜야 함.

- 취약계층 아동·청소년 지원사업의 종합적 접근을 위한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지원
 - 정부의 단위시설 중심적 서비스제공 패러다임에서 지역공동체시스템 구축을 지향하는 패러다임 전환방식으로 취약계층 아동·청소년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원내용과 지원방식이 필요함.

□ 노동관련 사회적 안전망 정책 제언

-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범위 확대
 - 자발적 퇴직의 경우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실직 후 일정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.

-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필요
 -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의 경우 생애 취업이력에 변화가 많아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안전망으로는 이들의 근로빈곤

위험을 보호하기 어려움. 따라서 자영업, 1인 기업을 하는 사업주에 대한 보완적인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이 절실히 필요함.

○ 제2 사회안전망 도입 고려

- 노사정 및 시민사회 간의 긴밀한 협의 및 협력을 통해 실업 후 단기간의 소득보장 기능인 기존의 고용보험(실업급여)이 직업훈련도 포함된 생활 지원형 취업연계형태의 부조제도로 확대 발전될 필요가 있음.

□ 복지관련 사회적 안전망 정책 제언

○ 비경제활동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제도 대상 적용 방안 및 지원범위 확대

- 국민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(협업 배우자 포함) 간 노년기 빈곤과 불평 등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대상 적용 방안과 지원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.

○ 여성가구주 노인의 기초노령연금 급여 향상 및 제도 개선

- 노인가구 유형별 빈곤율과 빈곤갭비율 분석에 의하면 노인 남성가구주는 빈곤선 근처에 분포하고 있어 기초노령연금을 통해 빈곤선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으나, 노인 여성가구주가는 빈곤선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아래에 분포하고 있어 기초노령연금만으로는 빈곤선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음. 따라서 장기적으로 여성가구주에 대한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 향상이 필요함.

○ 맞벌이 및 저소득가구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화와 소득안정을 위한 보육 서비스 개선

- 영유아 가구 중 맞벌이 혹은 저소득가구 여성의 지속적인 노동참여 지원과 노동공급시간을 증가하기 위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 지원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.

□ 건강관련 사회적 안전망 정책 제언

- 위기집단에 대한 긴급지원제도의 의료지원 기간 및 범위 확대
 - 경제위기 이후 취약계층 여성의 건강문제는 생계와 주거와 함께 일차적인 위기상황으로 나타남. 그러나 이들을 지원하는 기존의 긴급지원제도의 의료지원은 단기적이고 1회성 지원의 성격을 띠. 따라서 장기적이고 주기적인 의료지원은 취약계층 여성의 건강유지와 증진, 더 나아가 빈곤 탈출을 위한 역량강화로서 지역사회의 공공·민간의료기관 및 단체를 연계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.

- 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확대방안
 -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취약계층 전업주부의 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대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건강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.

3. 정책효과

- 가족문화, 노동, 복지, 건강영역을 아우르는 다차원적이고 통합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

- 사회의 주체로서 취약계층 여성의 삶의 질 제고

- 취약계층 여성가구주가구의 가족기능 및 관계성 강화와 빈곤의 세대이전 차단

- 교육훈련과 생활비지원이 겸비된 제2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고용보험 도입 촉진

- 맞벌이 및 저소득가구 여성의 소득안정을 위한 보육서비스 환경 조성
- 비경제활동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
- 취약계층 및 위기집단에 대한 의료의 접근성 향상 및 건강형평성 제고

-
- ▶ 주관부처 : 여성가족부
 - ▶ 관계부처 : 보건복지부, 고용노동부, 각 지자체 등
-